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를 읽고

유팔무

한림대 교수 · 사회학

과거 군부독재 시대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풍부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억압되는 측면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냐 하는 논의도 있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6월항쟁과 6·29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탈권위주의' 시대 혹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기' 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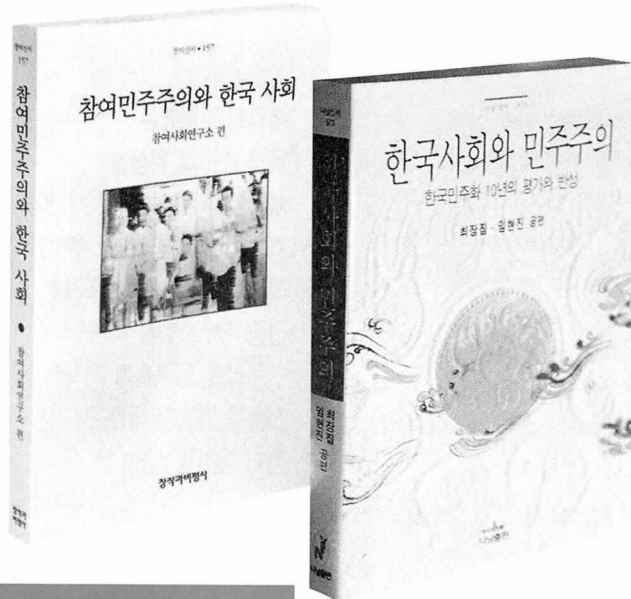
한국민주주의의 성격과 단계

첫번째 쟁점은 "어떤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냐"하는 것이었다. 일단의 학자들은 기존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등으로 칭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과 대립시키면서 후자를 진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의 학자들은 전자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였다.

두번째 쟁점은 87년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하에서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는가, 혹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겉모습만 민주화되었다는 견해에서부터 형식적·절차적·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고 있다는 견해,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어느 정도 완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뿐이라는 견해들이 제출되었다.

이번에 거의 동시에 출간된 두권의 '한국사회 민주주의론'은 주제가 비슷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권의 책은 공히 그동안의 논의로부터 한걸음 더 진전된 수준의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나남출판)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 공동으로 97년 6월 '한국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한 논문들을 기초로 최장집·임현진 교수가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직관적이거나 선언적이지 않고 대부분 특정한 민



한국사회 민주주의론을 다룬 두 권의 책은 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주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앞의 책이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뒤의 책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저작이다.

주주의 이론과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필자들의 대부분은 민주화가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전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민주화의 문제를 당위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사회제도 개혁, 정권의 사회적 기반, 정당정치, 노사관계 등)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어 논의를 풍부화시키고 있다.

사실 이 책에서의 중심 주제는 민주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소위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는가, 아니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있다. 필자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행단계'를 지나 이미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는가 아닌가에 대해 약간씩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 공고화인지,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및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도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필자의 상당수는 민주화가 마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학자들의 이론을 다분히 무비판적·무반성적으로 한국에 적용,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를 '세력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어 아쉽다.

이 점에서는 정영태 교수의 논문 <6공화국과 문민정부의 성격>이 가장 돋보이고 역작이라 평할 만하다. 노동정책과 재벌정책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그러하거나, 이를 그 이면에서 작용한 세력관계를 통해 분석적으로 조명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박길성·윤상우의 <민주화와 사회제도의 개혁>도 비록 세력관계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금융실명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등 87년 이후의 중요한 제도개혁의 추이와 성격변화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어 돋보인다.

참여민주주의론 조망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펴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창작과비평사)는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필자들이 공동의 주제를 놓고 작업한 결과물이며, 민주주의 문제를 여러 관련 요소들(참여,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지방자치, 사법, 노동조합, 사회복지, 통일 등)을 통해 조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김대환·손혁재 등 필자

들은 대부분 앞의 책 필자들과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성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에게 실질적 민주주의란 '참여민주주의'이다.

참여민주주의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라 할 수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 대신에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각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주어질 제도를 가리킬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 각 생활영역에 적용해 사고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저작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여의 개념과 정도 숙제로 남아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와 소개, 한국적 적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혹은 민중적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을 중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책 역시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한걸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책 대부분의 필자들에 비해(민주주의론에 국한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은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책에서 참여라는 것의 의미가 명약관화하게 밝혀졌는가 의문이 남는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참여이고 올바른 참여인가는 어느 정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연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나 각 생활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남는다.

두 책 모두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전망'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중요한 참고문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출판/A5신/454면/14,000원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A5신/470면/13,000원